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예천군 입장



예 천 군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예천군 입장

지난 16일 국무총리의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 관련 브리핑과 20일 대구시와 경북도의 합의에 따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이에 예천군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향을 군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예천군민 여러분!

경북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북도청 이전과 도청신도시 조성은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의 대국민 약속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도청신도시는 여전히 1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구는 당초 목표인 10만 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 기반 조성 역시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해 도청 소재지로서의 위상을 찾아볼 수 없고, 먼저 이주해 온 주민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소식에 당혹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경북도청 이전은 낙후된 경북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국민 약속이었으며, 그 약속을 이행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광역 행정통합 추진은 절대 수긍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현 경상북도 청사가 통합특별시 행정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현재의 경상북도 청사를 통합특별시청으로 한다는 것을 특별법에 명시하여 경북도청 신도시가 행정중심도시로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행정통합 이후 행정·경제·문화·산업의 기능이 다수결 논리로 다시 대구시로 집중된다면, 경북 북부권은 이전보다 더 빠른 쇠락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재정지원 인센티브 배분과 자치권 보장이 명문화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재정지원 인센티브는 도청신도시와 경북 북부권에 우선 배분되어야 하며, 기초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이 행정통합 특별법에 명확히 담겨야 합니다.

셋째, 산업 활성화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경북도청 신도시 완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당초 계획된 사업은 물론, 의과대학 설립과 국가 단위 공공기관 이전, 철도·도로망 확충,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해 도청신도시 완성을 앞당기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에 예천군은 향후 추진계획을 군민들께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첫째, 예천군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행정통합 추진 상황을 예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과 공유하고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둘째,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여 관련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공공기관 이전,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도시 지원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예천군은 경북도청 신도시와 경북 북부권 발전이 명확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